

학교급식 배추김치 빠지나

복지시설 식단서도 제외 ... 저소득층 김장나눔 행사도 실종될 듯

업체 단가 인상 요구 ... 단무지·깍두기로 대체

배추 한포기 값이 1만2000원까지 치솟는 등 '배추 대란'이 확산하면서 광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사회 복지시설의 식단에까지 뿔방이 튀고 있다.

배추 등 채소가격 폭등에 따라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단가인상 없는 '출혈납품'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최악의 경우 학교급식에서 배추김치가 실종될 지경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에서 김치를 제외하고 아예 새로운 식단을 짜는 '고육책'을 검토 중이다.

3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는 광주지역 업체 20여 곳이 농산물 납품단가를 인상해줄 것을 요

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업체들은 "배추 한포기 값이 1만 2000원선까지 올라 김치 1kg을 생산하는 데 8000원 안팎이 들어가는 데 급식 납품단가는 2500원, 3000원에 그쳐 납품할수록 손해"라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이들의 요구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급식납품 단가 인상에 대한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광주 학교 급식에서 김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급식 대상 학교 300여개교(초·중·고 특수학교)의 급식 납품단가의 재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무상 급식예산(180억원)의 추가확보는 물론,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를 인상

하는 것은 가게 부담의 가중을 불러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아직 배추값 인상이 여과가 학교급식에까지 미치지 않았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납품단가 인상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납품단가를 인상은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배추김치 대신 단무지, 깍두기 등 김치를 대신하는 반찬으로 식단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은 폭등하는 배추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독거노인 80~90명에게 제공하던 급식에서 배추김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식아동이 있는 54세대에 매일 배달

하는 도시락 메뉴에서도 김치를 빼야 할 형편이다.

복지관들이 매년 실시해온 김치나눔 행사도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복지관은 매년 12월께 실시해오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에 김장배추를 배달하는 '김장나눔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지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배추 등 채소가격 폭등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적은 양을 담글 수밖에 없다"며 "복지관의 재정사정에 맞춰가며 김장재료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배추값 인상이 장기화돼 후원물량이 끊긴다면 행사 개최 여부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폭등하는 배추값 때문에 학교 급식식단에서 김치 품귀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서일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들이 급식시간에 점심을 먹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마담 노트' 280명 성매수 혐의 확인

목포경찰 전담반 편성 ... 89명 휴대폰 기록 등 조사

'목포 톨살롱 마담 장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장부에 적힌 남성 398명 중 280명의 성매매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수사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3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장부에 적힌 남성과 압소 주인 등 사건 연루자 409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320명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에 연루된 혐의를 확인했다. 320명 가운데는 톨살롱 업주 등 3명과 여종업원 37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부에 기록된 남성 398명과 여종업원 등에 대한 대질 심문을 통해 남성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장부에 함께 기록된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시인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남성 89명에 대해서는 휴대폰 기록과 보강 조사 등을 통해 명확하게 성매매 여부를 가릴 방침이

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원을 요청하는 등 조속히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톨살롱 마담 장부 사건'은 지난 6월 경찰이 성매매를 나간 H톨살롱 여종업원과 손님 간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톨살롱 마담이 갖고 있던 거래 장부를 찾아내면서 불거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빈집털이 2명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3일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쳐온 정모(21·전북 전주 시 완산구)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동기인 정씨 등은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에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김모(29)씨의 집에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10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3개를 몰래 가져가는 등 지난 6월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창문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경찰서 출입자명부로 수배 조회 민원인 개인정보 침해

동의·사전고지 안해

광주지역 일부 경찰서가 민원인들이 청사 출입시 작성하는 출입자명부를 이용해 수배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경찰서는 출입자명부에 적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조회를 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논란마저 일고 있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따르면 형사과, 수사과, 교통과 등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을 회수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방문부서 및 응무 등을 기록하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찰서의 경우 '청사보호 및 사고발생시 추적'이라는 출입자명부 작성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민원인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수배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배조회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고지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민혹을 사고 있다.

광주 A경찰서의 경우 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 가운데 직접적인 범죄 연루 개연성이 없더라도 하루 평균 10~20명에 대한 수배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A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 중 외도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조회처리실을 통해 수배조회를 하고 있다"면서 "경찰서 자체방호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만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 경찰의 경우 민원인 출입자 명부를 이용해 수배 조회를 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경찰서가 조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형사과나 수사과 등을 방문하는 단순 민원인들에 대한 출입자명부 작성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과학수사센터나 종합상황실 등 14곳에 대해서만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형사과 등을 방문하는 단순 민원인들에 대한 출입자명부 작성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뺑소니 저녁시간 때 많다 밤 8~12시 사이가 25%

흔히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뺑소니 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뺑소니 사고는 주로 저녁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손해보험협회가 '2007~2009년 뺑소니 사고 피해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녁 8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전체 뺑소니 사고의 24.5%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는 저녁식사와 함께 음주를 한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사실로 인한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대비로는 인천(1만명당 1.95명), 광주(1.80명), 대전(1.74명) 등이 제주(0.87명), 울산(0.89명)에 비해 뺑소니사고 피해자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연합뉴스

통행료 안내려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술에 취한 30대 회사원이 대리운전기사와 다툰 뒤 음주운전을 했으나 대리기사가 확고에 신고하는 바람에 면허취소 처분.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4·화순군 화순읍)씨는 지난 2일 새벽 0시55분께 광주시 동구 소재 동소태IC 요금소에서 대리기사 윤모(24)씨와 통행료 1200원의 지불 문제로 다투다 윤씨가 내리자 10m 가량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소태 IC 요금소에서 대리기사 윤씨가 내려버리자 기다리고 있던 운전자들이 향의 하자 요금소를 통과하기 위해 운전했는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46%로 결국 면허취소.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가을산행 돌연사 조심

담양·강진 사고 잇따라 ... 몸 상태 따라 무리 말아야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산에 올랐다가 돌연사 하는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일 오전 8시 35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월출산 전망봉 정상 부근에서 김모(42)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하산했다. 김씨는 평소 특이성 알레르기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날 낮 12시10분께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 정맥에서

전모(65)씨가 급성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다 사망했다. 경찰은 전씨가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곧바로 산행을 하다 기도가 막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교차가 심한 가을 산행의 경우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거나, 충분한 휴식 없이 산행을 진행하면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사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화장장 이용 타지역 주민 이용료 인상

지역민과 차등 적용

광주시가 지역 내 화장장 및 봉안당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대폭 올려 지역민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3일 "광주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와 장사시설 사용자 지역제한 규제완화를 요청

함에 따라 화장시설과 봉안당 이용을 전남 및 타지역 주민까지 확대하고 대신 이용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시설의 경우 만15세 이상 지역민은 9만원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전남도민은 45만원, 타 지역민은 90만원을 내야 한다. 봉안당도 지역민은 1기당 28만원인데 반해 전남도민은 60만원, 타 지역민은 90만원을 납부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차 10월 1일 2차 10월 4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